

# 광주·전남 통합, 전산 마비·인사 갈등 '장애물' 넘어야

## 창원시·청주시 '행정통합 백서' 분석

광주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상 첫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결합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통합의 성패를 가를 험난한 지뢰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일보가 과거 행정통합을 이뤘던 창원시와 청주시의 통합백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조직 융합 실패와 전산 행정 마비 리스크 등 혼란과 시행착오가 여실히 드러났다.

창원시는 마산·창원·진해, 청주시는 청주와 청원을 통합했다.

통합의 혼란은 전산 및 정보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가장 터져 나올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3개 시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지방세, 세외수입, 건축행정, 재난관리, 지방재정, 지방인사 등 국가 표준 시스템은 물론 다수의 자체 전산망을 통합하기 위해 방대한 모의 테스트와 사후 관리를 거쳐야만 했다.

기초자치체 간의 결합 사례로 미뤄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역과 기초 단위라는 완전히 다른 도농 간의 정보 체계를 하나로 엮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만약 회계, 세정, 인사, 복지 전산망 통합이 매끄럽게 맞물리지 못하면 세금 부과 오류는 물론, 각종 수당과 급여 지급, 복지 자격 검증 시스템이 즉시 흔들리며 갑작스러운 행정 마비 사태와 행정 마비 사태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방대한 규범과 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 역시 거대한 장벽이다.

창원시 백서에는 3개 시가 각기 운영하던 도로명주소, 옥외광고물,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수많은 조례를 하나의 제도로 묶는 과정이 엄청난 혼선과 형평성 논쟁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의 광역 조례와 전남도의 조례, 여기에 전남 산하 22개 시군의 조례까지 얹어 있는 규범 정리는 창원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통합 초기에 법과 조례, 규정의 기준이 하나로 정립되지 않으면 기업과 시민들이 겪을 혼선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대 광역 지자체 산하로 편입되면서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맹목적 몸집 불리기 부작용 경고  
조직 융합·시스템 통합 성패 좌우  
세정·복지 등 전산망 연동 실패 땀  
민원 대란·행정마비 사태 발생  
방대한 조례·제도 등 통일도 힘로

마산 지역은 통합 이후 자본과 행정력이 구 창원 일대로 집중되며 원도심이 급속도로 슬럼화됐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창원시의 하루 행정구로 묶여 있다는 통계적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의 인구 감소지역 심의 대상에서 배제돼 국비 특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는 전남의 읍한 군 단위 지자체들에게는 섬뜩한 예고편이다.

이들이 광주전남 특별시 산하로 편입될 경우 전체 평균치에 의해 통계적으로 희석돼,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에서 탈락하고 치명적인 재정 고갈 사태를 맞을 수 있다.

공무원 조직 내부의 불신과 인사 갈등은 통합 지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치명적 위험 요소다.

창원시 백서는 통합 후 공무원 조직 내 갈등 원인 가운데 승진 등 편파적 인사 갈등이 5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적시했다.

통합 과정에 대한 불만 요인 1순위로 역시 인사 불공정이었다.

통합 후 조직 개편과 맞물려 승진 기회는 줄고 업무량은 폭증하면서 하향 평준화와 인사 적체라는 후폭풍이 몰아쳤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직급 체계와 보직 규모가 훨씬 방대해, 통합 후 승진과 분청 보직 배분에 대한 뚜렷한 원칙을 합의문이나 법에 못 박지 못하면 통합 출범 전부터 공직 사회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

경제력과 개발 격차가 나는 소외감 증폭도 반면 교사다.

청주청원통합 백서 발간용역 자료는 통합의 단점으로 농촌 지역 상대적 소외, 투자와 개발의 도심 편중, 농정 소외감 증폭 등을 소개했다.

광활한 농산어촌과 산단이 분포한 전남도와 대도시 광주시의 격차는 청주청원보다 훨씬 커서, 균형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발전 장치가 미흡하면 전남 도민의 피해의식이 정치적으로 비화할 위험이 높다. 개발 주도권과 공항, 항만 등 대형 프로젝트 배치를 두고 어디에 무엇을 놓느냐로 끊임없이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사항 불이행을 막을 강력한 감시 기구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이 필수적이다.

청주청원 백서는 과거 통합 실패의 원인으로 행정기관의 약속 이행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통합합의 이행위원회를 두고 예산 편성과 공무원 인사에 대한 감시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상 초유의 광역 단위 통합이라는 미지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 지자체들이 통합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행정통합 특별법, 시민주권 강화 장치 부족 생활권 단위 자치권 보장 안전장치 담아야"

### 광주전남 시민사회 토론회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대규모 행정 구역 개편이 행정 효율을 높이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확대에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과 시민주권 정치개혁을 위한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3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상정된 발의안을 토대로 자치권, 환경, 마을공동체 등 각 분야의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로 최악의 '난개발 독소조항'들이 상당 부분 걸러진 점을 평가했다.

환경 분야 분석을 맡은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립공원 해제 권한이나 전방위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국도를 훼손할 우려가 컸던 조항들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무분별한 특례 요구의 비상식성을 정부와 국회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비토권 부재와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 미비 등은 여전히 감시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자치권 및 지역 발전 분야에서는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민주권' 강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이나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등 최소한 장치는 마련됐으나,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발의 요건 완화 특례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자치를 강조한 박충평 마을공동체 공동체 대표는 "행정의 단위가 거대해질수록 주민의 삶과 밀착된 마을 단위 자치는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거대 행정 기구 설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명확한 주민대표 기구로 법제화하는 등 생활권 단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의 광주-목포, 광주-광양간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주민 직접 조례 발안 운동 제안 등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논의됐다.

시민사회 대응팀은 "광주·전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한국-브라질 정상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톨라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래 산업에 대한 교류 확대,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그동안 무역 투자와 우주, 방산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오늘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격상하기로 한 만큼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양자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톨라 대통령 역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

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을 필두로 반도체-우주산업-방위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톨라 대통령은 "양국이 녹지산업이나 에너지 전환, 탈탄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어왔다"며 브라질이 지난해 출범한 '열대우림 보전기금'에도 한국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도 내놨다.

한편 양 정상은 산업협력 외에도 정상 간 우호 증진 및 양국 국민의 교류 확대 등을 두고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